

“혁신도시 ‘꼼수 채용’ 중단하라”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일부 공공기관 검토에 “강경 대응… 특별법 예외규정 개선돼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앞장섰던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일부 공공기관들의 신입사원 꼼수 채용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전북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특별법 예외규정을 적용한 신입사원 채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혁신도시특별법 예외규정을 이유로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한 신규채용 비율을 적용한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을 담고 있는 법 취지에 어긋나며 ‘꼼수 채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민선6기 전반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을 역임한 김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법제화하는데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 지방대학, 대학생, 정치권 등과 적극 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보고회

군산시는 12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7면>

응한 결과, 정부는 올해 18%까지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할당제를 의무화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국가균

형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로 떠나는 이 탈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법제화됐다”며 근본 취지를 설명한 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명과 같은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예외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예외규정을 핑계로 꼼수를 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근 기자>

전주서 찜질방 화재… 용접 중 과열로

12일 오전 0시34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 소방본부와 사우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지하 2층 세탁실에서 수도관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용접 하던 중 과열로 인해 보온덮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도관을 감싸고 있던 보온재로 불이 옮겨 붙자 지하 1층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 사이 세탁실 안에서 난 불길의 연기를 자욱하게 뿜으면서 번져나갔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큰불로 확산되지 않을 수 있었다. 당시 사우나에 있던 55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며 이중 15명이 연기 흡입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3일 오전 1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화재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수면제 먹여 조카 성폭행 50대 징역 7년

수면제를 먹여 어린 조카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준 뒤 몸을 만지고 유사성 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모두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7월 우연히 만난

조카에게 수면제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2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진다”며 “다칠 수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척인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까지 먹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군산 폐공장서 구리선 훔친 3명 구속

공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구리전선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2일 특수절도 혐의로 박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장물을 취급한 고물수집업자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달 18일 군산시 오식도동 한 제조업 공장에 들어가 50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훔치는 등 전북과 충청도 일대를 돌며 5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과 고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에 군산을 드나든 1t 포터 차량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여 용의자를 특정해 충남 지역에서 3명을 잡거했다. 박씨 등은 훔친 구리전선과 고철을 이씨에게 1100만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

전주시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앞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4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전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대상은 전년 대비 182호 증가한 4만3467호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산정 여부, 주택특성조사 적정 여부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그동안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검증 및 20일간 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승용 세정과장은 “이번 심의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대법 “휴대폰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참여연대, 7년 전 미래부 상대 소송… “국민 전체 삶에 중요해 공익 인정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4세대 이동통신인 통털에 불투선

(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취지 등 일반인 설명만 써있어 공개가 되더라도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항목들은 개별적인 항목들의 합계금액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개되더라도 기간통

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업 통계명세서에 적힌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및 고용인원수 등 정보도 중요한 영업상 비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 등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 소송을 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공평한 요금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의무가 있다”며 “7년이 걸렸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원가 정보 및 정부의 심사 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클라우드펀딩대회 워크숍

전주시가 시민 투자자 모집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공동체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시는 12일 전주시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주세요’ 등 12개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 대상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주 클라우드펀딩 대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클라우드펀딩 대회에는 전주시 사회적기업 3곳과 예비사회적기업 1곳, 사회적협동조합 1곳, 자활기업 1곳, 온두레공동체 6곳이 참여해 모금에 나선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선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펀딩 성공사례 △기획 및 홍보방법 △등록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들 12개 참여기업들에게는 1:1 전문 컨설팅과 프로젝트 웹페이지 디자인이 무료 제공되며, 온·오프라인 홍보와 전국 단위 클라우드펀딩대회 응모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대회는 30일 홈페이지가 개시되면, 사회적기업 플랫폼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를 통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